

국방부, 5.18 계엄군 헬기사격 공식 인정

사격 명령·증언, 헬기 작전계획 지침 등이 사격 근거... 전투기·공격기 폭격 검토 확인 못해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38년만에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또 5·18 당시 공군은 제10전투·제3훈련 비행단에서 전투기·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제 '광주행 폭격을 검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개월 간 조사한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육군은 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점, 실제 사격 명령이 이뤄진 점, 무장 헬기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 진술,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들었다.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상무중정 작전에 참여한 육군 병력 등과 협동작전으로 공중에서 시민 상대 헬기 사격을 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라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1980년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 헬기사격을 지시했고,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계엄군은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군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전투부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에는 "상공을 비행·정찰해 버스·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방화·사격하는 집단을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하천·임야·산 등을 선정해 위력 시위 사격을 실시하라" "시위 사격은 20mm 발칸, 실 사격은 7.62mm가 적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계엄사령부는 '헬기 사격 실시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할 것'을 지시했다.

"발칸 위협사격 실시로 양민 경고 분리 및 위압감·공포감 효과 달성하라" "무장한 자나 사격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에게는 집중사격 하라"는 구체적인 경고문(방송) 내용도 밝혀졌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4회에 걸쳐 "무장헬기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입작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23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은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김기석 부사령관 등에게 "왜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를 동원해 빨리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고 질책한 뒤 사격명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4일에는 11공수여단장이 '83세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 받은 것을 시민군에게 공격 받은 것'으로 오인,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 헬기로 무차별 사격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5월 21일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비무장 시민에게 직접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두고 "비인도·아만·잔학·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스 탑승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

북한 응원단이 7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입경하고 있다.

5월 27에는 계엄군 특공대의 전남도청 진입과 시민군 제압을 위해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18 당시 헬기조종사 5명은 특조위 조사에서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지만,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와 관련, 특조위는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입작전계획으로 검토됐는지 여부"의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특조위는 5·18 당시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자료와 공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5·18과 관련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가 없어 조사가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왜곡해 5·18 관련 중요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 필름(MF)으로 전환하면서 자료가 폐기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5·18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재언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집안은 '육군과 공군, 해군(해병대)의 3군 합동작전이었다'고 규명했으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헬기 사격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도의회 문건위, 민간위탁기관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7일 제 360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전주세계소리축제위원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라북도문화관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문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공과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2018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청취하며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완수 위원장(임실)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산실로서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연이 연중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희경 의원(비례)은 전주세계소리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만족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주차문제 해결,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병·도·시의원들 "정책선거 치르자" 다짐

전주시 병 지역도·시의원들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용모 도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을 향해 "색깔론과 지역주의 등 부적절한 선거를 뒤로 하고 정책과 공약을 내세운 선거를 치르자"고 주문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정당들은 선거과정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결에 소홀했다. 지역주의 정치 환경과 색깔론 등으로 정책과 공약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덕진)지역 시·도의원들과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한 핵심 당원들은 이런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라는 목표를 삼고 '정당정치와 지역개발 공약 정책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선거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체가 돼 정책과 공약이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1·2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역정책과 공약은 주민 토론회를 통해 입안돼야 하고, 당선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3차 시민·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법원 이전 부지 활용방안 등 지역발전 정책공약을 주제로 토론회를 예정이다. /뉴시스

국민바른, 당명금지 '국민바른'으로 돌아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양당이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우리미래'의 약칭인 '미래당'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쓰고자 한 미래당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일 통합신당의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으나 청년정당인 '우리미래'가 동일 약칭을 선관위에 신청하면서 '미래당' 이름의 사용 권한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양당의 한 관계자는 "미래당 당명을 못쓰게 됐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최종 후보에 올랐던 '국민바른'을 새 이름으로 결정해야 하는 지 등을 놓고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탈세·횡령·불법 분양'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법원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비자금 조성·관리 혐박' 경리과장도 구속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 등 혐의로 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오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구속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중근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13분께 법원 도착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혐의들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나'는 등 질문에 "회사가 법 다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석역원대 세금을 탈부한 혐의와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